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7년 8월
교육학석사(상업정보교육전공)학위논문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상업정보교육전공

황희영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200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상업정보교육전공

황 희 영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성 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상업정보교육전공)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상업정보교육전공

황 희 영

황희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 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 2장 지역주의 확산과 FTA	3
제 1절 FTA의 개관	3
1. FTA의 정의 및 적용범위	3
2. WTO 체제 하의 FTA	5
3. FTA의 국제적 동향	8
제 2절 지역통합의 효과	10
1. 지역주의의 대두배경	10
2. 지역주의의 형태	11
3. 지역통합의 효과	13
4. 지역주의에 대한 비판	14
제 3장 한·중 FTA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16
제 1절 한국의 FTA 추진현황	16
1. 대외적인 측면	16
2. 대내적인 측면	20
제 2절 중국의 FTA 추진현황	27
1. 중국의 FTA 정책	27
2. 최근 중국의 FTA 추진 동향	28
제 3절 한·중 FTA 추진현황과 문제점	32
1. FTA 체결 대상국으로서의 중국	32

2.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	33
3. 한·중 FTA의 추진상의 문제점	38
제 4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43
제 1절 한·중 무역 및 산업협력 관계 분석	43
제 2절 양국의 산업구조 분석	47
1. 농·수산업부문 비교	47
2. 제조업의 비교	52
제 3절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57
1. 경제적 효과	57
2. 한·중 FTA의 추진방안	60
제 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67
제 1절 결론	67
제 2절 정책적 제언	69
참고문헌	70

표 목 차

<표 2-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5
<표 2-2> 지역협정 체결 시기	6
<표 2-3>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의 건수(04. 01)	7
<표 3-1> 한국의 FTA 추진현황	20
<표 3-2> FTA 체결대상국가와의 무역수지효과	23
<표 3-3> 한국의 FTA 체결(추진) 국가 경제규모	24
<표 3-4> 한국의 FTA 추진현황	25
<표 3-5> 중국의 FTA 추진 대상 국가·지역(2006년 3월 현재)	29
<표 3-6> FTA 산업별 영향도	34
<표 3-7> FTA 추진 Roadmap	36
<표 4-1> 한·중 세계교역 비중 추이	46
<표 4-2> 한·중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47
<표 4-3> 한·중 주요경제 및 농업지표(2005년)	49
<표 4-4> 한국의 대중국 1차 상품 교역(2000-03년 평균)	51
<표 4-5> 한·중 기술수준별 산업구조의 비교	53
<표 4-7> 한·중 산업간 경쟁관계	55

그림 목 차

<그림2-1>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의 규모	6
<그림2-2>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의 건수(04. 01)	7
<그림2-3> 자유무역협정의 지역별 체결 추이	8
<그림3-1> 중국의 주요 FTA 추진국과의 협상추진 추이	30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Hwang, Hee Young

Advisor : Prof. Lee, Sung Min, Ph. D.

Business Informa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Nowadays under the complex world's trading circumstance, regionalism through FTA has become the mainstream forces of the world trading system. A Korea and China have recently announced policy goals to pursue a number of FTAs simultaneously as a way of national strategies.

China is Korea's neighboring country that has become the largest trade partner, and has an immense potential for future economic growth. A Korea-China FTA will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of Korea which relies heavily on the foreign export market. Korea aims at implementing comprehensive FTAs involving tariff elimination, service, invest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bring its best effects to the nation.

In this context, China can be a highly beneficial FTA partner for Korea. An FTA with China is a key issue of economic cooperation in order to confront soaring Chinese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markets. Korea-China FTA will allow Korea easy access to a huge market and reduce the one-sided safeguards of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will in turn improve Korea's balance of trad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Korea's economic growth through a high degree of specialization of industry structure, and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investment toward China.

A Korea-China FTA has many implications, such as increasing the trading volume and potential economic growth. It is obvious that Korea-China FTA would provide a new impetus for growth. Korea needs to focus on the protection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increase exports, combining large corporation's exports in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ales.

The positive benefits of free trade are increasing effectiveness through expanding the market and encouraging competitiveness. It will provide Korean companies with the distinct opportunity to work in China.

To maximize the net effects of a Korea-China FTA, Korea and China should both accelerate vertical integration within industries to increase intra-industry trade. This kind of restructuring of intra-industry divisions can help to avoid domestic deindustrializ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act that such a policy causes domestic demand and exports to develop at the same time. Benefits from foreign policy can be achieved not by destroying the domestic industry, but by developing an industry for domestic demand. It is highly important to approach a Korea -China FTA with the strategic combination revitalizing domestic investment, promoting human resources, improving technology by R&D investment, and securing the macro-economy into establishing potential growth, trade volumes, and a positive transition of trade structuring.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7년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에 대해 중국의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중 양국이 진행 중인 FTA 관련 연구가 서둘러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천3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5년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한 당시 노 대통령과 약속했던 2012년 교역액 2천억 달러 목표를 조기 실현하자고 말했다. 이 같은 원 총리의 발언에 따라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중국과의 FTA 협상 진행도 한층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번 한·미 FTA 협상의 주요 논점은 농업분야에 있었다. 이제 한·중 FTA에 한·미 FTA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전략적 협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의 파고가 드높은 가운데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 연구 단계를 마무리 , APEC 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산 관 학 연구를 원칙적으로 1년 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과 중국 간의 FTA에 관한 새롭게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중 FTA에 관한 양국의 태도를 보면 한국은 소극적인데 반해 중국은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중국은 지금이 한국과 FTA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몇 년이 지나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 는 등의 빠른 협상 개시를 재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번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한국과 중국 간의 FTA 협상체결과 체결 시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한겨레신문, 2007. 04. 06.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현재 전 세계적으로 FTA에 대한 양허안과 협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한·미 간 FTA 협상결과를 시사점으로 하여 보다 전략적 협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점은 한·중 FTA에 따른 우리경제의 방향성이다. 우리경제가 멕시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협상전략을 꺼내들지는 모르나 그 협상카드에 따라 우리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판으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한국의 FTA 현황과 FTA가 가져다주는 득과 실은 무엇이며, 중국과의 FTA체결에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가장 효과적 협상을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에 의한 서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국회도서관, 대외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의 정책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 자료 등을 분석·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FTA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서 FTA의 개관, 지역통합의 효과를, 제 3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현황과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 및 문제점, 그리고 제 4장에서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마지막 제 5장에서는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제 2장 지역주의 확산과 FTA

제 1절 FTA의 개관

1. FTA의 정의 및 적용범위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뜻하며, 협정을 맺은 특정국가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무역특혜는 수입관세 인하(궁극적으로 철폐)로서 이러한 무역특혜를 통해 국가 및 지역 간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 및 시장 통합이라 볼 수 있다.

시장 및 경제통합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역 및 국가 간 협정은 FTA를 포함하여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1)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의 EU와 같은 완전경제통합, (2) 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와 같은 공동시장²⁾(Common Market), (3) 베네룩스동맹과 같은 관세 동맹, 그리고 마지막으로 (4) North Americas Free Trade Agreement(NAFTA)와 같은 FTA가 있다. 베네룩스 관세동맹과 NAFTA의 차이는 역외국가에도 관세인하혜택을 주는가에 따라 다르다. 즉 관세동맹은 역외국가에도 협정 국가들과 같은 공동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FTA는 협정국 이외에는 관세인하혜택을 주지 않은 배타적인 협정형태라 볼 수 있다.³⁾

FTA의 협정국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이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위배 된다.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은 불명확하여, FTA가 WTO 규정의 합치 판단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WTO 규범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다.

2) 공동시장 형태란 관세혜택 이외에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제 및 시장 통합 형태이며, 완전경제통합이란 공동화폐 및 일괄적인 경제정책설정까지 포함된 실질적 시장 통합을 의미한다.

3) 정책연구보고서 「동북아 지역의 FTA체결을 위한 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 한국, 중국, 일본의 에너지 부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4, p.10.

첫째, 특정분야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할 경우

둘째, 협정국간 적용된 관세인하는 합리적 기간 이내(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되어야 할 것

셋째, 관세인하와 같은 규제완화 내용이 협상이전 보다 악화되어서는 안 될 것

넷째, 개발도상국의 경우 허용조항에 따라 차별적 특혜가 적용 가능한 경우

FTA의 적용범위는 기본적으로 관세인하 및 철폐와 관련되어 있지만, 협정국간 이해관계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즉 공동시장 형태와 같이 생산요소의 이동을 협정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완전경제통합형태와 같이 협정국간 정책적조화도 FTA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최근 FTA 협정내용 중 관세철폐 이외에 지적재산권, 유통서비스장벽개선, 정부조달 등과 같은 사안이 거론되면서 FTA의 적용범위가 교역재와 관련된 관세장벽이외에 비교역제 및 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비관세 장벽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⁴⁾

아래 <표2-1>과 같이 역내관세 철폐를 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NAFTA)과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공동 관세를 부과하는 베네룩스 관세동맹, 또한 자유무역, 공동관세부과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를 포함하여 역내 생산요소자유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이 있으며, 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며 초국가적 기구까지 설치 운영하는 완전경제통합까지 포괄적이다.

4) 상계서, p.15.

<표 2-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 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 공동 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NAFTA, EFTA 등)				
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				
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 등)				
완전경제통합(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자료: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ofat/mk_a005/mk_b033/mk_c065/mk05_05_sub02.jsp)

2. WTO 체제 하의 FTA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계약국에 따라 많은 다른 면모를 띠고 있다. 예전의 전통적인 FTA와 개발도상국간의 FTA는 주로 관세인하에 주를 두고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계기로 FTA의 적용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커지고 있다.

FTA의 상품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무역구제제도와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까지 협정의 대상으로 두었으며, 또한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해 고관세에서 저관세로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협력영역이 위 분야 외에 다른 분야로 확대된 것도 적용범위가 점차 커지고 있는 원인이다.

또한,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다. 47년 간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많은 176건의 지역무역협정 통보가 이루어졌다. 한편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 내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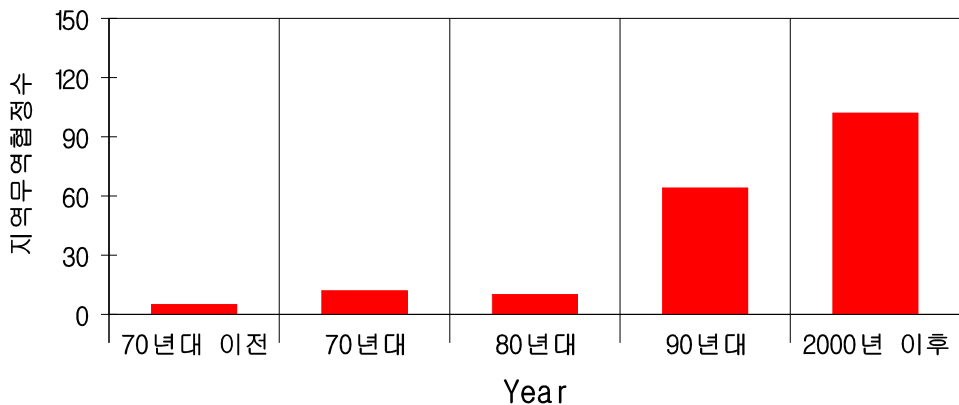
현재 발효 중인 193 개의 지역협정을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 하나 19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2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2-2, 2-3 참조).

<표 2 -2> 지역협정 체결 시기

70년대 이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
5개	12개	10개	64개	102개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curiss/fta/referdata_research/list.aspx)

<그림 2-1>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의 규모



자료 : <표 2-2> 를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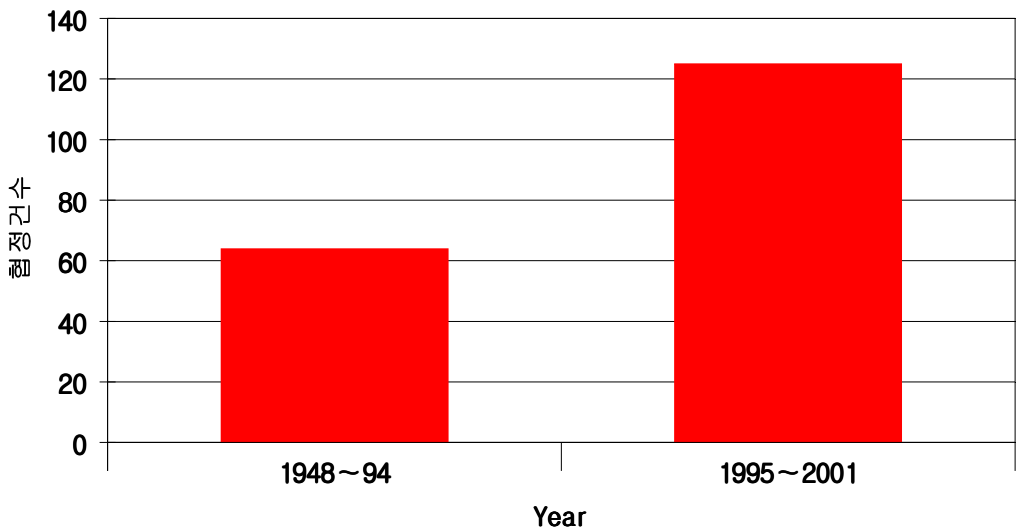
<표 2-3>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의 건수(04. 01)

	1948~94	1995~2001
협정 건수	64	125

자료: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ofat/mk_a005/mk_b033/mk_c065/mk05_05_sub02.jsp)

<그림 2-2>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의 건수(04.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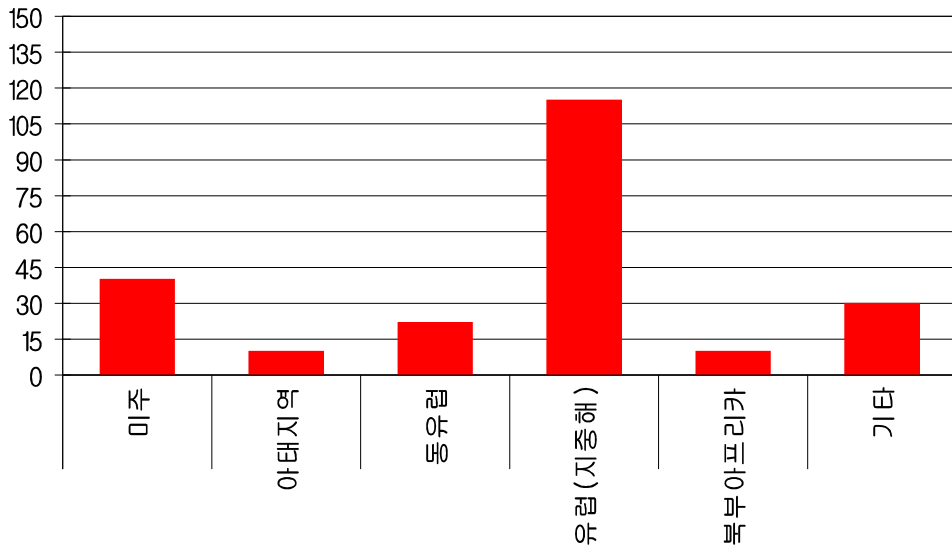
자료: <표 2-3>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FTA의 국제적 동향

현재 FTA의 국제적 동향은 기존에 경제통합을 통해 수혜를 누렸던 국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NAFTA의 혜택을 누린 멕시코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아시아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위해 접근 중이며, 호주와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 중계무역 기지로 자유무역을 옹호해 온 싱가포르 등이 여러 국가에게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접근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추세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큰 편이다. 현재 발효 중인 협정의 50% 이상은 서유럽과 지중해연안 지역에서 체결되었고, 다음으로는 미주지역과 동유럽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태지역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다음 <그림2-3>과 같이 이 지역 국가들도 점차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 자유무역협정의 지역별 체결 추이



자료 : 정인교,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1, p.11. 수정보완

2003년 멕시코 칸쿤 DDA 각료회의의 합의 실패 이후 다자체제의 발전에 대한 우려감 확산, 지역주의 자체의 장점, 선진국들의 전략적 통상정책 강화 등으로 FTA 등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유럽 및 미주 지역이 역내 외 국가와의 경제통합을 가속시킴으로서 세계적인 지역주의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인근 동유럽 및 지중해 10개 국가를 신규회원국으로 편입하고, 멕시코, 칠레에 이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과의 FTA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범 미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목표아래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3년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이후 다른 동남아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고, 2003년 미국은 EAI(The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를 통해 아세안과의 FTA 추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던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중이며, 중국은 2000년 11월 부르나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ASEAN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추진의사를 밝힌 이후 양 지역의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 수는 2개 국가 이상이 될 수 있으나, 발효 중인 172개 협정의 약 60%에 해당하는 98개 협정이 2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신규로 체결되었거나 추진 중인 협정의 대부분은 기존 협정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지금까지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을 분석하여 보면, 자유무역협정이 관세동맹에 비해 더 활발하게 체결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이 더 활성화 되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회원국 각자가 무역정책과 역외국에 대한 관세에 있어 재량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유무역협정이 선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6)

5) 강민정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pp.7~9.

6) 정인교, 전게서, p.18.

제 2절 지역통합의 효과

1. 지역주의의 대두배경

지역주의(Regionalism)란 지역통합이나 경제통합 또는 지역무역협정 등으로 표현되거나 이의 법적 기초가 되는 조약의 명칭을 빌려 지역협정 또는 지역통합협정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다만 무역블럭이란 표현은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암시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7) 지역주의는 통합수준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하는데, 상품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역외공동관세 및 무역정책 실시를 동반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를 보장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경제정책 실시를 수반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초국가적인 기구 설치로 모든 경제·사회정책까지 통합하는 완전경제통합(Economic Unification)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지역주의를 형성케 하는 경제적 유인을 살펴보면, 먼저 국경사이에 존재하던 각종 경제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경쟁의 촉진, 규모의 경제의 실현 등을 통해 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역내 생산 활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역내국간의 결속 강화, 거대한 통합시장이 가져올 협상력강화 등으로 해당지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지역주의는 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에서 대두된 것으로 개도국으로 파급되어 갔는데 1970년대까지는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 통합지역의 구조적 취약성과 통합성과 부진 등으로 그 대외적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출현한 EC 통합과 NAFTA등 지역주의 경향은 이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합의 강도 및 속도면에서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은 크게 다음 2가지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국제경제의 역학관계의 변화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는 표면적으로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여 왔으나 그 저변에는 196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7) 전의천 「국제무역의 이해」 조선대학교 출판국, 1998, p.225.

급부상, 1980년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EC나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력의 저하라는 세계경제력 판도의 변화가 축적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주요 선진국 간에 경제성장률 격차,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현상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되자 상대적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저하된 경제력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에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주의와 지역주의 성향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체제 종식으로 서방진영의 이데올로기적 결집력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GATT체제의 기능약화와 UR 협상의 지연을 들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해온 다자간 협상기구인 GATT체제가 참가국들의 이해관계 대립 및 의사결정 기능의 비효율성, 그리고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등 새로운 무역영역을 다루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점의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 GATT의 규범력을 재확립하려는 시도로 1986년 이후 UR 협상타결이 지연되자, 무역문제를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 간에 지역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던 것이다

2. 지역주의의 형태

국제무역에 있어서 지역주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부 특정국가들간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보다 더 낮게 부과하여 역내 생산품에 대해 차별적 특혜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혜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각기 다른 개별경제들이 하나의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며 결합되어 가는 과정 또는 그 상태를 경제통합이라고 지칭하며, 더 나아가 경제통합은 참여국가들간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들을 차별적으로 제거함과 아울러 경제협력과 정책조정 요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주의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경제통합의 형태로 실행 계획되어 왔는데 그 통합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완전정치통합의 5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⁸⁾

1) 자유무역지대

가맹국 사이에는 관세나 기타 무역제한을 철폐하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는 각 가맹국의 자주적인 규제에 맡기는 국가 간의 동맹을 뜻한다. 다시말해 관세동맹과 같이 지역적인 무역의 확대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공통관세(共通關稅)를 과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관세동맹과는 다르다. 경제통합체 중에서 그 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32년 설립된 영국의 연방특혜관세제도는 일종의 자유무역지역을 의도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1967년 가맹국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거의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이룩하고 있으며, 1961년 발족한 지역경제통합체인 LAFTA(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가 있다.

2) 관세동맹

경제적·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함으로써 동맹국 상호간에 교역의 자유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즉, 협정의 범위와 정도에는 동맹국간의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혹은 경감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맹국 이외의 나라와의 교역에 대하여서는 동맹국 간의 경우와는 달리 공통관세(共通關稅)를 적용하여야 한다.

대외적인 공통관세 유무에 따라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이 구별된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대내적으로 보면 자유로운 무역이 행하여지는 면에서 관세동맹과 유사하나 대외적으로는 공통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회원국 독자적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3) 공동시장

국제간에 일어나는 경제적 통합형태의 하나이다.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여 경제적 통합을 이룩한다. 공동시장의 가맹국 사이에서는 무역제한이 철폐되고 자본이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8) 전의천 상계서, p.228.

이동도 자유롭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 1994년 1월 출범한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을 들 수 있다.

4) 완전경제통합

국경을 초월한 지역적 경제통합을 하는 일을 뜻한다. 시장 확대에 의한 대규모 생산의 이익과 생산성의 제고(提高)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 산업부문의 통합, 역내 관세(域內關稅)의 철폐, 역외(域外)공통관세의 설정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자유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초의 움직임은 1950년 슈망 플랜에 의해 이듬해 유럽 6개국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결성이었다. 경제통합이 가장 대규모적이고 또 성공한 사례는 이 ECSC가 발전한 것으로서, 1958년 1월의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발족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적 경제통합은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FTA)·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CACM)·동남 아시아연합(ASA)·아랍공동시장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설립이 검토되기는 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것에 OAEC(아시아 경제협력기구)·아시아 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 등이 있다.

5) 완전정치통합

EC는 경제통합인 동시에 정치통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유럽합중국방식’과 각국이 주권을 가지면서 정치협력을 하는 ‘국가연합방식’이 대립해왔다. 1970년 이후부터 정기적인 외무장관회의에 의하여 정치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3년 유럽연합(EU)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지역통합의 효과

지역통합의 효과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크게 교역창출효과와 교역전환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역창출효과라 하면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회원국들 간에 관세의 철폐로 인해 회원국들 상호간의 수입가격이 관세비용만큼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종전까지 관세장벽 때문에 역내에서 교역되지 않았던 상품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어 회원국 간에 새로운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교역창출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내의 효율적인 공급자들(efficient suppliers)에 있어 무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교역전환효과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이 결성되어 회원국들간 상호간에 관세가 철폐되면 회원국으로서는 역내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에 비해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종래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오던 상품을 역내 회원국에서 수입하게 될 것인 바 이와 같이 관세 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결성으로 인해 수입상대국이 비회원국에서 회원국으로 바뀌는 효과를 가리켜 교역전환효과(trade diverting effect)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당해 회원국의 역내 수입상대국이 세계에서 가장 생산비가 낮은 나라가 아니라 단지 역내에 있어 가장 생산비가 낮은 나라 인 데에 문제가 있다. 환언하면 이러한 교역전환효과는 지역협정 밖에 있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자로부터 단지 무역특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지역협정내의 비효율적인 공급자에게로 교역상대가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⁹⁾

4. 지역주의에 대한 비판

유럽에서의 EC, 북미에서의 미국과 같은 지역적 리더들은 GATT 성립초기의 미국의 역할에서처럼 긍정적 역할을 할 수 도 있으나, 각 지역의 리더들이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국제교역의 룰을 만든다면 국제교역의 질서는 큰 혼란을 겪을 것이며, 따라서 다자간 룰의 성립은 어렵게 된다.

또한 지역협정 당사국외의 국가들에게는 지역협정이 그들의 시장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가 주된 관심사이다. 여기에 대해서 무역장벽의 완화효과가 있어 시장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지역협정 당사국외의 국가들은 시장에 적응하는데 더 많이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적 특혜는 존재할 것이며, 역외국 자신의 시장에 대한 양보 없이

9) 전의친, 상계서, pp.230-231.

는 통합된 시장에의 역내국과 동등한 접근의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

지역협정은 개별국가의 Market Power의 합계보다는 큰 Market Power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Market Power는 다른 국가에 대해 동등한 양허를 받아내거나, Safeguard조치나 반덤핑조치의 남용 등 보호주의 정책의 예비리지로 사용된다.

이러한 Market Power도 양자적으로나 다자적으로 무역을 자유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EC의 농업정책에서처럼 지역실체의 보호주의 하에 기여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런 조치들이 세계무역의 중심 국가들에서 이루어질 경우, 다자간 무역체제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¹⁰⁾

10) 전의천, 상계서, p.237.

제 3장 한·중 FTA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제 1절 한국의 FTA 추진현황

1. 대외적인 측면

우리나라는 GATT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 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¹¹⁾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4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3%),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11) 남중현. 「한국 FTA정책의 虛와 實」. 세계경제연구원, 2006, p.210.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개방의 혜택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차례차례 주요 교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전략은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협상별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무역수지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¹²⁾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체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12) 박순찬. 「한국 FTA 추진의 전망과 과제」, 「KIEP 세계경제」 5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2.

FTA 추진과정에 각계 전문가와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를 협상에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개국 이상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별 FTA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지난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고 양국이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품목 수 기준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 발효 후 양국 간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칠레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싱가포르 FTA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여 2004년 11월 타결되었다. 이 협정은 2005년 8월 양국 장관 간 서명되었으며, 2005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여 2006년 1/4분기에 발효가 되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서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되어, 양국 간 교역이 상당 폭 증가하고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¹³⁾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의 협상은 2005년 1월에 개시, 7개월 만에 타결되어 2005년 12월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 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인 ASEAN 10개국과의 FTA 협상은,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2월에 협상이 개시되어 2005년 12월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하였고,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상품자유화 방식의 경우, 수입액 기준 97% 자유화(90%는 관세철폐, 7%는 0~

13) 한국무역협회, 「중국 관세율 및 수출입요령」, 2006, p.17.

5%까지 관세감축)에 합의하였다. 특히 중국보다 3년이나 늦게 협상을 개시하고도 중국과 동일하게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선점의 길을 제공하게 되었다. 작년엔 상품분야 잔여협상 및 서비스·투자협상이 타결되어 한-ASEAN FTA가 완성되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아시아 지역 통합의 허브(Hub)로 부상하게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와는 2005년 1월 및 3월 두 차례의 사전협의를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7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 시 FTA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12월 3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어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정부조달 등 세부 분야별로 협의가 진행 되었다.

멕시코와는 6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마치고, 2005년 9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개시되었다. 당초 2005년 내 타결을 목표로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¹⁴⁾ 우리는 일본 측의 진향적인 농수산물 분야의 양허제시를 포함하여 비관세조치의 개선, 정부조달 시장 진출확대 등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 반영된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 초에 완료하였으며,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2005년 5월 및 8월 공동연구 회의를 가졌다.

이밖에도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FTA나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 4월 2일에는 한·미 간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향후 전 세계 FTA 교역에 그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

WTO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교역의 절반이상이 FTA 체결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교역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을 보면 싱가포르 60.1%, 미국은 35.3% 중국은 19.6%, 일본도 2.4%인 반면 한국은 0.5%

14) 한국무역협회, 상계서, p.20.

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의 FTA 추세가 단순히 상품의 관세만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 정부조달, MRA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경험하는 상대적 불이익은 훨씬 크다고 하겠다.

이처럼 세계적인 FTA의 확대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도 2004년 4월 발효된 칠레와의 첫 FTA를 출발점으로 현재 많은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 중이다 (표 3-1 참조)¹⁵⁾.

<표3-1> 한국의 FTA 추진현황

	기체결	협상중	산·관·학 연구	검토
국가	칠레('04.4.1 발효) 싱가포르 ('04.11 타결) EFTA ¹⁶⁾ ('05.7 타결) 미국('07.4 타결)	일본('03.12 개시) ASEAN('04.2 개시) 캐나다('05.7 개시) EU('07.5 개시)	멕시코 인도 Mercosur	중국

자료 : 정재화, 세계 FTA추진현황과 우리의 대응,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학회, 2005. 09, p37, 수정보완.

2. 대내적인 측면

FTA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어 2005년 말경에는 300여개 FTA가 발효

15) 金英筭,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p.13-14.

16)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중일 것으로 WTO가 전망하고 있는 만큼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출주도형인 우리경제가 점차 고립될 것으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년 내 세계에는 대륙차원의 2개의 거대한 무역블럭(EU동진, 범미주 범미주 34개국의 FTAA)이 2005년경에 출현하고 타 대륙 간 FTA에 EU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인도, 태국, 미국, 멕시코, 칠레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ASEAN과 FTA조기 체결을 위해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등이 경쟁을 하고 있다.

FTA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NAFTA, EU 등의 경험에서 볼 때 협정범위가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관세철폐효과에 그치지 않고 시장 확대에 따른 무역창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개방과 경쟁에 따른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FTA에 의해 확대된 경제협력이나 정치경제관계 강화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KOTRA해외무역관조사에 따르면, FTA 확산 속에 우리기업들은 FTA 미체결에 따른 관세·비관세장벽, 정부규제 등 불이익을 받아 글로벌경쟁에서 상당한 어려움 직면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멕시코(자동차), 말레이시아(H형강), EU(섬유제품), 헝가리(자동차), 베트남(종이류), 칠레(EU로 무역전환)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에 대해 두 나라 산업계와 관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 참석했던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과 별도로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두 나라 통상장관은 회담에서 한·중 FTA 공동연구를 1년간 한다는데 합의하고 이 기간에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포괄 범위, 산업별 영향 분석, 민감품목 보호방안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공동연구가 끝나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각국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를 갖고 공동연구팀의 구성과 연구 일정·범위·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해 양국이 합의를 도출한데는 지난 2004년 11월 아세안+한·중·일 회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민간공동연구 실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5~2006년에 걸친 민간공동연구 기간에 한국은 농수산물, 섬유·의류, 서비스 관심분야 등을 중점 연구했으며 중국 측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서비스 관심분야 등에 집중 연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 FTA 모멘텀을 살려나가되 FTA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을 도출했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요를 살펴보면 공동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두었으면 연구 개시 시기는 07년 초이다. 연구범위 및 내용으로 한·중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와 한·중 FTA포괄범위 및 산업별 영향 분석과 민감품목의 보호방안 등에 대해서 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연구 종료 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FTA추진 로드맵을 확정하였으며 동시다발적 FTA추진,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추진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대상 국가들과의 FTA 체결효과를 종합해 보면 무역 효과측면에서는 선진국 보다는 ASEAN, 인도, 멕시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체결 속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분업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

특히 선진국과의 FTA체결의 효과는 단기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선진국과의 FTA체결은 산업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제품위주(Low-end)로 특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체결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표 3-2 참조).

<표3-2> FTA 체결대상국가와의 무역수지효과

(단위: 억불)

구 분	FTA체결 전(2003년)			FTA체결 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일본	172.7	363.1	-190.4	212.9(+40.2)	464.2(+101.1)	-251.39(-60.9)
싱가포르	46.4	40.9	5.5	47.0(+0.6)	53.2(+12.3)	6.2(-6.2)
멕시코	24.5	3.3	21.2	31.3(+6.8)	5.1(+1.8)	26.2(5.0)
캐나다	26.8	18.9	7.9	35.6(+8.8)	28.4(+9.5)	7.2(-0.7)
인도	28.5	12.3	16.2	56.9(+28.4)	17.7(+5.4)	39.2(23.0)
미국	342.2	248.1	94.1	422.2(+82)	413.1(+165)	9.1(-83)
ASEAN	202.6	184.6	18.0	308.4(+105.8)	229.8(+45.2)	78.6(60.6)
EFTA	12.0	20.1	-8.1	18.6(+6.6)	27.5(+7.4)	-8.9(-0.8)

* 자료: http://www.fki.or.kr/curiss/fta/vision_in/list.aspx(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가 체결하고자 하는 FTA의 종착점은 많은 국가와의 체결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재편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FTA 로드맵의 주안점은 우리나라 산업의 장기 발전방향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동시다발적 FTA추진 전략과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체결 전략은 어떤 FTA 조합이 이상적인가를 파악해야 하며, 특히 한·일 FTA협상과정에서 나타나듯 산업 기술격차가 큰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 저부가가치 산업중심으로 특화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FTA체결(추진)국가별 경제규모는 <표 3-3>과 같다.

<표 3-3> 한국의 FTA 체결(추진) 국가 경제규모

※2004년 기준, * 표시한곳은 FTA 기체결국임.

	EU (유럽연합)	싱가포르*	중국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인구(만명)	4억9000	434	12억9227	5억4437	3190	1억380
GDP(억달러)	14조2000	1068	1조9317	7969	9798	6765
교역액(억달러)	620	102	794	464	56	34

	EFTA (유럽자유무역 연합)*	인도	일본	칠레*	미국*	메르코수르 (남미공동시장)
인구(만명)	1225	10억5000	1억2776	1596	2억9500	2억2613
GDP(억달러)	6221	6919	4조6234	941	11조6675	7766
교역액(억달러)	27	54	678	26	716	47

자료 : 한국경제 2007. 4. 4. , A6면.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전략과 산업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FTA 체결 시에는 기술 중진국, 개도국과의 동시체결을 추진해야하며, 한·일 FTA체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ASEAN과의

FTA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 미국과의 FTA 체결 시에는 중국, 멕시코와의 동시 체결하는 방식, 인도, 브라질 등 시장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체결하는 방식도 고려해 봄직 하다.

<표3-4> 한국의 FTA 추진현황

구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향후계획
협정발효	칠레	2004.4.1.발효	-
협상타결	싱가포르	2005.8.4 서명	2005.12.1 국회비준
	EFTA	2005.7.12 타결	가서명(9.3)→본서명(12월중) →2006년 하반기 발효
	아세안	2005.11.29 상품분야 주요내용타결	2006하반기 발효 추진
	미국	2007년 타결	-
협상진행	일본	6차협상 완료	6차(2004.11)이후 교착상태
	캐나다	3차협상 완료	2006상반기 협상타결 추진
공동연구	멕시코	6차 연구 완료 (공동연구 종결)	2006. 1~2월경 협상 개시
	남미공동시장	2차 연구 완료	2006년말 또는 2007년초 3차연구 예정
	인도	3차 연구 완료	2006년 12월 4차연구 예정
민간연구	중국	2005 공동연구 개시	향후 2년간 공동연구
	한·중·일 3국간 FTA	2003공동연구 개시 (중국 측 제의)	2005 연구완료

자료 : 김석오, “FTA관세특례법의 주요내용과 그 의의 및 향후과제”, 「관세와 무역」, 2006년 1월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01, p35, 수정보완.

FTA는 국회의 비준절차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협정이 일반적이 원칙만을 규정하거나 국내법령에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사항이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FTA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절차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FTA초기 도입단계에 있는 국가는 기존의 관세제도와 상이한 새로운 제도와 절차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내법령 체계를 맞추지 아니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오류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FTA 시행에 따른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협정과 국내법령 체계의 조화를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국내법령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입법상식과 관련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칠 FTA관세특례법과 같이 개별 FTA마다 이행특례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 및 지역공동체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어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이에 따른 입법을 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한국은 한·칠 FTA를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한·싱FTA가 체결되었고 2006년 상반기 중 한·아세안 FTA 및 한·캐나다 FTA가 체결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멕시코·인도·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곧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며 (<표3-4> 참조), 앞으로 최대 50여 개국과 FTA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¹⁷⁾

이러한 상황에서 FTA가 체결될 때마다 개별적인 이행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적·행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협정발효를 지연시키며 국내법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입법경제의 달성과 신속·간편한 협정발효를 위하여 기본법 방식의 입법추진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기본법 방식의 일반적 관세특례법의 제정은 매 FTA 체결시마다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이행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FTA의 신속한 발효가 가능하다. 이외에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세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통관 및 대국민 납세편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¹⁸⁾

17) 외교부 2005년 업무계획, p.10.

18) 金英筭, 전계논문, pp.19-20.

제 2절 중국의 FTA 추진현황

1. 중국의 FTA 정책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흐름 속에 중국경제의 대외통상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WTO에 가입한 이후 급성장을 하고 있다. 글로벌화 가속화 추세는 중국의 대외통상에 중대한 기회와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역으로 중국의 변화는 글로벌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1979년부터 2004년까지 25년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9.6%에 달해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왔다.¹⁹⁾ 2005년의 성장률은 9.8%에 달했다. 2005년에 중국의 경제규모는 약 2조 달러에 달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경제규모가 머잖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1991년~2001년에 중국의 대외 상품무역 신장률은 연평균 약 15%로 세계 평균 신장률의 3배에 달했다.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은 더욱 크게 증가하여, 2000년~2005년에 연평균 25% 증가해 세계 평균 신장률 10%보다 훨씬 높다. 세계무역 총액에서 점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1년 1.6%에서 2005년 6.7%로 급상승했고, 현재 중국은 세계 3위의 무역국이다. 2005년에 중국의 FDI 유치액은 724억 달러에 달했고 1979~2005년에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누계는 약 6,4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준이다.²⁰⁾

거대한 인구대국인 중국의 부상은 국제통상의 발전 역사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중국경제의 성장방식과 성장구조의 변화는 물론, 세계분업구조 및 통상구조의 변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 대국이면서도 높은 대외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 의존도를 보이는 중국의 부상은 전통적인 국제통상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

19) 2006년 1월 9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경제센서스 수치에 근거해 경제성장률 역대 수치를 수정함. 이에 따라 1979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9.6%가 되어, 종래의 발표치에 비해 0.2% 포인트 높아짐(참고: 신화사 통신 보도).

20) 대만 經濟日報 2006년 6월 9일자 기사.

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²¹⁾

중국이 지역경제통합을 인도할 조건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시각은 중국이 타국과의 FTA를 자국의 이해관계를 증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를 형성해 나가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FTA 정책은 국제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 중, 일, ASEAN 회원국 등이 각기 역내외 국가·지역을 상대로 하여 다양한 형태, 차원, 수준, 범위의 FTA를 동시다발적이고도 상당히 복잡하게 추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촉발시키는 주요 원인에는 ‘중국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국 요인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 관점은 중국경제의 세계적 부상에 대한 인접국·지역의 반응으로 역내 FTA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Roland-Holst.(2003)는 중국의 경제대국화와 WTO체제에 대한 지지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종래의 지역주의를 재평가하고 기존의 지역블록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경제가 WTO에 가입하는 등 개방과 국제화 내지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고 중국의 수출경쟁력과 수출규모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종래의 지역주의의 효과나 기초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역블록의 구조와 범위, 통합수준 등을 재조정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점은 최근 중국이 인접국·지역과의 경제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해 역내 FTA 구조의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蔡宏明(2003)은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중국은 동아시아의 기러기형(flying geese) 경제발전패턴에서 후미에 위치했고 세계경제와의 교류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피동적인 지역경제협력 전략을 전개했으나,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후 특히 WTO 가입을 계기로 지역경제협력을 주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어떤 관점으로 보든 중국 요인은 중요성을 띠지만, 최근에 중국이 FTA를 주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최근 중국의 FTA 추진 동향

21) 한국산업정보원, 「중국산업연감」, 2006, p.59.

2006년 3월 현재 중국은 총 37개의 경제체와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공식협상 또는 공동연구 진행 중)에 있다(표3-5참조). 이 중 주요국은 FTA가 이미 체결된 ASEAN 10개국과 칠레, 현재 FTA 공식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GCC(걸프협력회의), 그리고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한국, 인도 등을 들 수 있다. 아직 공동연구 단계까지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SCO(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과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²²⁾ 또한 중국은 FTA는 아니지만 지역무역협정(RTA)에 속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옛 방콕협정) 회원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²³⁾

<표3-5>중국의 FTA 추진 대상 국가·지역(2006년 3월 현재)

지역		국가
아시아	동남아 (ASEA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10)
	동북아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4)
	남아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4)
	중동(GCC)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6)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2)
유럽		아이슬란드 (1)
남미(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5)
아프리카 (SACU)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 (5)
합계		37개 경제체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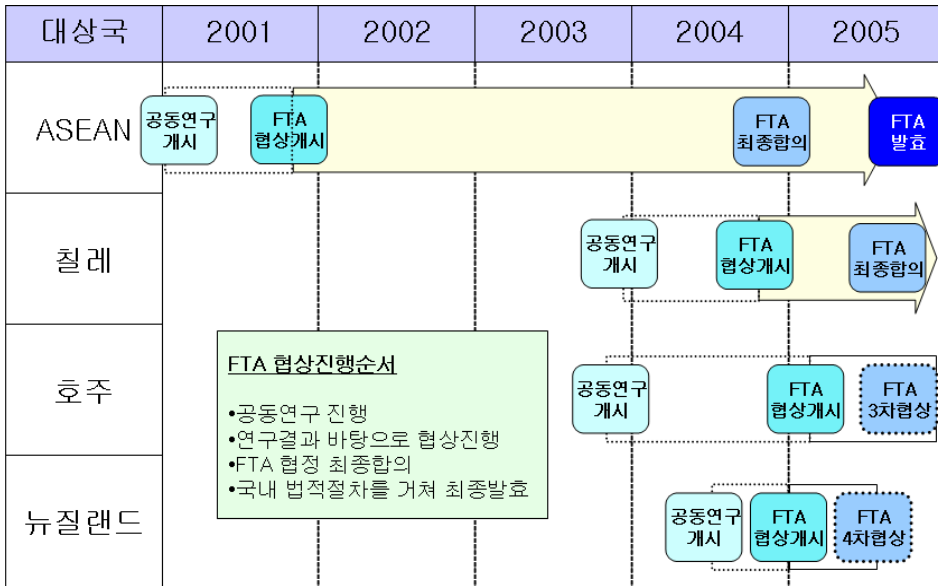
자료: http://www.mofat.go.kr/mofat/mk_a005/mk_b033/mk_c065/mk05_05_sub02.jsp

22) SCO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23)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며, 2006년 7월부터 회원국 간에 총 3,221개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24) FTA가 체결되었거나, 공식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경우만을 포함.

<그림3-1> 중국의 주요 FTA 추진국과의 협상추진 추이



자료: KIEP 연구중간심의 자료 -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2006년 7월, p.50.

한편 중국의 FTA 추진시 소요되는 기간은 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 참조). 일반적으로 FTA 추진과정은 공동연구 → 공식협상 라운드 → 최종합의 → 발효 등으로 구분되는데, 중국이 ASEAN, 칠레,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등과 진행한 공동연구는 짧게는 4개월(중-뉴질랜드)에서 길게는 1년 5개월(중-호주)이 소요되었다.²⁵⁾ 뉴질랜드의 경우, 2004년 4월에 서방국가로는 최초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함에 따라 중국과의 공동연구에 가속도가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호주는 오히려 뉴질랜드보다 먼저 중국과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나 중국이 중시하는 MES 인정을 주저한 결과,²⁶⁾ 공동연구

25) 중-아세안 FTA의 경우 1년, 중-칠레 FTA는 7개월, 이외에 중-파키스탄 FTA 가능성연구에는 6개월이 소요되었다.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식협상 개시부터 최종합의까지의 소요기간과 협상 라운드 횟수는 공동연구 기간보다 국별 차이가 더 크다. 중-ASEAN FTA의 경우, 2001년 11월에 개시된 협상라운드는 2004년 11월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3년간 17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반면 칠레의 경우는 1년간 네 차례의 협상 라운드를 거쳐 최종합의가 이르렀다. 이는 단일국가가 아닌 ASEAN과의 FTA가 가지는 복잡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는 칠레보다 먼저 중국과 FTA 논의를 시작했으나, 중·칠레 FTA가 2005년 11월에 타결된 데 반해 중·호주 FTA는 2006년 6월까지 여섯 차례 협상을 거쳤지만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태이다.²⁷⁾

FTA 추진과정에서 소요기간과 협상 횟수가 상대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기본적인 원인은 국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경제제도이므로, 참여국은 FTA 추진 시 무엇보다도 먼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기 마련이다. 현재 중국은 다수의 국가·지역과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는 이해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²⁸⁾

26) 호주는 2005년 4월에 중국의 MES를 인정함.

27) KIEP 연구중간심의회 자료 -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p.10.

28) 조현준, 「중국의 FTA 정책의 전개와 전망」,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2006, pp.4~5.

제 3절 한·중 FTA 추진현황과 문제점

1. FTA 체결 대상국으로서의 중국

참여정부는 선진화된 경제시스템 구축, 대외이미지 제고, 동북아 경제중심지 실현,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달성을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FTA 추진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소이나 경우에 따라 정치·외교적 고려가 경제적 측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FTA 대상국 선정기준은 경제적 동기, 정치·외교적 동기, 국내 제도개선 및 구조개혁 동기, 국내 개방 여건 등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FTA는 단일 동기보다는 여러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로 볼 때, FTA는 더 이상 선택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전략적 통상정책수단으로 인식된다.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낮은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실익 위주로 대상국을 선정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ASEAN과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고, 한·ASEAN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ASEAN과의 FTA 추진이 필요하다.

고도성장, 내수시장, 높은 무역장벽 등으로 중국은 매력적인 FTA 대상국이다. 다만 농업문제, 정치체제상의 차이 등이 FTA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일본과 리더쉽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ASEAN과의 FTA 타결이후 우리나라와의 FTA를 제안할 수 있으므로 한·중 FTA가 중기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의 한·중·일 FTA는 현재 국책연구기관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중·일간 상호 불신, 일본의 의도적 무관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적 추진이 불가피하다.

동아시아에서 FTA 체결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고, 일본-싱가포르 FTA 및 중국-아세안 FTA가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는 다자주의 체제 속에서 경제 발전에 성공했으나 동시다발적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의 결과 위기를 맞았다. 동아시아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방어적 차원에서 FTA가 시작되었으나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입지약화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질서변화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세안과 이중의 방법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아세안 전체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세안전체와 FTA를 체결하기로 하고 먼저 농산물 중심으로 관세인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일-아세안, 중-아세안 FTA는 우리의 대동남아 및 대중국 수출에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줄 것이며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부상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아세안과의 FTA체결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나아가 동북아 FTA 및 장기적으로 아세안 +3로 구상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여 FTA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은 자유화,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적 특실의 경제 주체간 비대칭성, 산업구조 전환압력 등 충분히 고려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FTA는 특정 지역, 국가와의 자유화, 시장개방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때문에 다자간 자유화/시장개방을 특징으로 하는 WTO와 비교하여 산업별 영향도 케이스마다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나타나다 (표 3-6 참조).

<표 3-6> FTA 산업별 영향도

	DDA	한·일 FTA	한·중·일 FTA	한·중 FTA
섬유	유리	유리	유리	유리
화학	유리	중립	중립	중립
철강	중립	불리	중립	유리
기계	중립	불리	불리	유리
전자	중립	불리	유리	유리
자동차	유리	불리	유리	유리

자료 : http://www.mofat.go.kr/mofat/mk_a004/mk_b028/mk_c047/1166425_588.html

농업부문의 반대를 극복하고 FTA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협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실증적 분석 및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FTA 협상은 대외적인 협상보다 대내적인 협상을 더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대내적인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협상 사안의 성격, 내부 집단의 반응, 협상 사안의 정치이슈화, 정치적 리더쉽 등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FTA 협상은 위의 네 가지 대내협상 요인들 가운데 협상 타결 또는 비준을 위해 어느 한 가지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없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정치이슈화를 막고 강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하며, 또한 내부집단의 반응이 대청성을 갖도록 협정체결에 찬성하는 그룹의 목소리를 집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지나친 정치이슈화를 막기 위해서는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피해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적 이익이라는 확신이 서면 정부는 협정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성과, 산업구조조정 대책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경제의 장기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이에 FTA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경쟁열위산업을 비롯하여 FTA에 따른 잠재적 피해자들의 저항이 FTA 정책 추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이에 FTA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FTA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제반 정치·경제적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서는 특정산업의 피해 등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점을 모든 경제주체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꾸어 말해서 FTA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FTA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FTA추진의 모든 단계,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빈틈없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FTA에 의한 자유화, 시장개방의 속도와 FTA의 범위조정과 FTA의 여건 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사전적 조치, FTA에 따른 사회적·사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지원 등을 병행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WTO출범 이후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FTA는 시장 확대, 원자재조달, 국내경쟁, 해외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주요국이 체결한 FTA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도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기업들은 FTA 체결대상국으로 중국, 미국, 동남아 등 거대 시장을 선호하고 있고, 이는 FTA를 해외시장 확대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도성장파 WTO 체제 편입으로 국제적 위상이 제고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리드해 나가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양자간 FTA 추진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였던 중국은 WTO 가입을 전후하여 지역주의에의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 제1의 FDI 유치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국

+ASEAN FTA를 선제적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한 「개방형 대외통상전략」의 구체적 실천전략 차원에서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내수의 부진으로 수출증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FTA 미체결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예: 해외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불리한 경쟁여건, 개방화의 세계적 조류로부터 고립)을 고려하면 FTA 추진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칠레의 예로 FTA가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FTA는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즉, 이는 물품이 국경 간에 자유롭게 이동되는 환경이 구비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경제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최소한 동북아지역에서의 FTA가 결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일, 한-중, 한-중-일 FTA, 동아시아 FTA(ASEAN+3) 등 체결에 관한 Roadmap 설정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 중장기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였고, 동 로드맵에 제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FTA 추진 진행 중이다. 농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이들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낮은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실익 위주로 FTA 추진 대상국을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기관의 검토, 정부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 순위, 추진시기(단기 및 중·장기) 등에 따라 FTA 추진 로드맵이 설정되었다(표 3-7 참조).

<표 3-7>FTA 추진 Roadmap

기간 구분	해당국가(지역)
단 기	싱가포르, 일본
중 기	멕시코, ASEAN, 미국, 중국
장 기	동북아, ASEAN+3, EU

자료 : http://www.fki.or.kr/curiss/fta/vision_in/list.aspx

단기 추진 대상지역은 타당성이 확인되었거나 업계의 지지 등으로 국내적인 협상개시 여건이 성숙한 경우에는 협상단계로 조기 이행이 바람직한 나라이다. 중장기 추진 대상지역은 FTA 추진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건상 적극적 추진이 어려운 경우이며, 대내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한 경우이다.

고도성장, 내수시장, 높은 무역장벽 등으로 중국은 매력적인 FTA 대상국임에 틀림없으나, 농업문제, 정치체제상의 차이 등이 FTA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1위의 수출대상국이며,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으므로 FTA와 같은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한·중 FTA의 추진상의 문제점

1) FTA로 인한 수출 성장기대

현재 우리의 내수 경기는 기업의 수출증대와는 무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매년 한국의 수출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수출실적은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고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내수 경기의 지표인 서비스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증가했고 2월에 비해서도 0.7% 늘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분야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4%나 생산이 늘어났다. 특히 증권 및 선물중개업 등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은 47.4%나 증가했다.

그러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밑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48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기업경기전망(기업경기실사지수·BSI)을 조사한 결과 9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4분기 116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다. 특히 낙관적 경기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동등한 상태인 100 밑으로 BSI가 떨어진 건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의 40.1%가 2분기 경기가 1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호전을 예상한 업체는 20.0%에 불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4월 BSI 역시 98.6으로 기준치 100에 약간 못 미쳤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만 봐도 수출증가가 곧 국가경제의 긍정적 영향에 직결되어있다는 생각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²⁹⁾

이렇듯, 일찍이, 미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저명한 사회운동가이자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부정적 면을 경고한 바 있다. 촘스키는 그의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000만 명에 달하는 멕시코 농민이 엄청난 공공 보조금을 지원 받는 미국의 농산물에 지배당하여 멕시코의 농산물 산업이 파산에

29)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중장기 교역 전망」, 연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 2. 3, p.30.

이를 것임을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1993년 멕시코 정부는 NAFTA 체결 당시 낙관적 전망만을 홍보하면서 대중에는 협정전문을 비밀리에 붙이고 협정을 체결하였다.

현재, 94년부터 13년간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의 수출을 4배로 증가시키는 등 수출의 호조를 가지고 왔으나, 보호무역 시행시의 연평균 GDP 3%의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1.43%의 저 성장과 3300만에 달하는 멕시코 경제인구의 3/4가 임시직 또는 실업자로 전락하였으며, 취업자중 40%가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는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NAFTA 시행 이후 가장 수혜 업종인 제조업 종사자조차 시행 이전의 임금의 약 70% 정도의 임금을 받는 등 서민 경제는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실패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졌으며, 중산층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대기업의 국내부품 조달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과 하청업체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고용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를 보더라도 FTA 이전에 비해 수출은 4배로 늘었지만, GDP 성장률은 감소하는 등 내수경제는 날로 악화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수출증가가 곧 우리의 장밋빛 미래가 될 것으로만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무조건 개방에 대한 우려

최근 정부는 무역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무관세 개방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은 자유무역 관련 협정인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 FTA등에 있어서 조건 없는 개방을 한 바가 없으며,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의 협상을 하였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 무역 의존도가 70%넘는다는 정부의 발표도 수출입 무역액이 GDP에 미치는 비중을 무역 의존도로 표시하고 있는데, 수출입액은 최종생산물 가치인 반면 GDP는 부가가치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부풀려진 통계라는 견해는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무역의존도 통계는 거시적 경향성에 관한 통계이지 국민 경제 기여도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 개방만이 살길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농협 조사부장 신 기업 박사는 ‘무역의존도의 올바른 이해’라는 글(2007.3.26)에서 진짜 순 부가가치 개념으로만 시산해본 수출산업이 국내총생산액에 기여한 국민경제의존도는 70.3%가 아니라 8.9%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2006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2,538억 달러이며 부가가치 창출액은 약 607억 달러로서 국내총생산 6,801억 달러의 8.9%에 불과하다. 자동차 수출의 경우 실제 부가가치는 63억 달러로서 GDP의 0.9%이다.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총 수출액은 343억 달러이지만 부가가치 생산액은 109억 달러로 GDP 기여도가 1.6%이다. 반면 농업 부문이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3.2%이다. 농업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합한 광의의 농업 분야 부가가치는 GDP의 13%나 된다. 원화 부가가치로 환산한 국내총생산액에 대한 순 부가가치 기여액은 자동차 수출이 약 6조원, 반도체 및 전자부품 수출이 약 11조원,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22조원이다.

수출만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살길이라는 믿음의 근거에는 이렇듯 부풀려 알려진 정부 통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긴 어려울 듯하다. 그리하여 GDP의 3.2%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의 몰락을 당연시하는 허풍이 우리 학계와 경제계, 언론계에 회자되고 한·미 FTA의 진실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3) FTA만이 21세기의 대세이며 생존전략

한 국민경제지에 따르면,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세계경제에서 낙오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은 아직 1개의 FTA만을 체결했으며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체결한 FTA 수는 적고 중남미 국가는 평균 7개, 아프리카 국가는 평균 5-6개의 FTA를 체결했다"고 설명하여 FTA가 모든 선진국과 고도성장을 이루는 국가들의 선택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어디에도 FTA가 곧 미래의 필수적 전략이라는 국제적 대세는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1인당 GDP가 한국의 3배에 달하는 스위스도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도

포기함으로써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며, 금융이 GNP의 10%를 차지하는 금융 강국인 스위스조차 FTA를 21세기의 생존전략으로 선택하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 없이는 FTA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한·칠레 FTA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최대 피해자로 생각되었던 농수산물의 현재 상황을 보면 좀 더 정확한 현실이 보일 것이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농산물 분야의 타격이 FTA 체결 후 2년이 지난 지금, 정부 예상에 못 미치는 농산물 분야의 타격이 있었으며 수출증가가 수입증가에 비해 높으므로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FTA 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 비교나 예상치를 밑도는 타격을 떠나서, 실제로 농수산물 적자를 공산품 수출흑자가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는 자동차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재계는 사실 전 분야에서의 수출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과연, 이러한 미국의 낙관이 우리에게도 같은 비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상이몽인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하게 보인다. FTA 추진 시 예측되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산업이 현재보다 산업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다. 경쟁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은 살아남겠지만, R&D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부분의 첨단산업 관련 기업, 제조업 그리고 자본 열위인 서비스와 농수산물에 있어서 자유경쟁에 의한 도태는 막을 수 없는 결과이며 정부는 결국 우리 취약산업의 몰락과 IT분야의 수출증대를 맞바꾸려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산업의 다양성 부재는 곧 실업의 증가와 일부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경쟁력 우위 산업에는 생존전략이 될 수도 있으나, FTA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대적 열위의 산업들은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이다³⁰⁾.

4) 한·미 FTA의 실효성 의문

이번 한·미 FTA 체결로 미국에 오히려 우리중소기업 납품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FTA를 추진하여 우리가 가장 이익을 얻을 것이라 예상

30) Choi, Nakgyoon, Soon-Chan Park, and Chang-Soo Lee. Analysis of the Trade, 2003, p.157.

되는 일부 부문의 2~3%의 관세 인하를 통해 얻어지는 경쟁력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우리임금의 1/10수준의 노동력을 사용한 저가 상품을 미국에 해오고 있는 중국과 멕시코 부품업체의 납품가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또한 가격 경쟁력 면이 아닌 브랜드나 품질 경쟁력 면에서도 2%의 가격인하가 일본과 우리제품 간의 브랜드 가치를 메울 수 있는 분야는 기존 경쟁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IT 분야에서 몇몇 대기업만으로 생각되며, 대부분은 기업은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가 인도, 중국의 성장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FTA의 필요성은 미국시장에서 약간의 점유율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미 FTA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대 노조인 AFL-CIO와 CTW는 한국 노동계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 FTA에 공개적인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공동서명 단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초래한 문제점들, 예컨대 멕시코 근로자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미국 내에서도 100만개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결과 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미 FTA가 투자자들의 이익만 보장하고 근로자들은 빈곤 속으로 몰아넣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점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미간에 필요한 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공정무역³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입장에서도 스위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남미 등 35개국이 미국과의 FTA협상을 중도에 포기한 것을 예로 들며 FTA의 타결이 현 경제의 해결책이라는 교과서적 시각을 거부하고 한·미 FTA의 중대성에 비해 현 정부의 사전조사가 미흡하며, 국민적 합의와 의견수렴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31)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2006. 1, p.65.

제 4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제 1절 한·중 무역 및 산업협력 관계 분석

양국 간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한국대 중국의 교역규모는 수교후(1992~2000년간) 연평균 22%의 신장률을 이루며 대중수출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중수출의 증가율은 27.4%, 수입은 18.6%로 대중수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2월 말 기준, 중국은 185억 달러로 우리의 제 3위의 수출대상국이다. 미국, 일본에 이어 그 순위를 달리고 있다. 수입 또한 128억 달러로 일본, 미국에 이어 제 3위의 수입대상국이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한 화인경제권(화인경제권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3억 달러로 전체 흑자액 118억 달러의 1.7배)에 대한 수출액은 428억 달러, 25%의 비중(한국의 총수출에 대한 비중)으로 한국의 최대수출 시장이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한국 중국 간의 경제적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등 무역거래의 편의성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본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당시인 1992년과 2000년 교역을 상호 비교해 보면 수출은 주상품 이었던 섬유원료, 종이제품, 전선 등이 없어지고, 산업용전자, 가정용전자, 플라스틱 제품 등이 2000년 새로운 품목으로 등장했다. 수입은 비금속광물제품, 섬유사, 유기화학품 등이 없어지고, 전자부품, 산업용전자, 수산물 등이 2000년 새로운 수입품목으로 등장하였다. 이들 교역은 예전에는 수직분업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은 수평분업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전자부품, 철강, 산업용 전자 및 가정용 전자 등의 품목에서 강한 수평분업형태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시장인 미국, 일본 등의 시장점유율 비교를 통해 한국과 중국 간 무역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중국은 1995년 대비 2000년 한국의 미국, 일본 및 EU 시장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중국의 동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미국, 일본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점유율을 비교하자면 중국의 주요 품목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한국과 중국의 대미수출 10대 품목에서 중

국 상품이 미국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비해 비편물제 의류, 부속품 및 편물제 의류, 부속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이들 품목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비해 우세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에 기계류와 그 부품, 차량 및 그 부품을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모두 하락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의 주유품목시장 점유율이 대부분 하락하였다. 전기기기과 그 부품, 기계류와 그 부품에서 한국 상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995년 에는 중국의 동 점유율에 비해 높았으나, 2000년에는 중국이 앞서 역전을 하였다. 미국에서 중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자동차와 그 부품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중국의 대미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을 비교해 보자면 이 또한 · 미국시장과 유사한데 2000년 일본시장에서 한국 중국 모두 20대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13품목 가운데 1995년에 비해 광물성 연료, 왁스1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에서 중국 상품의 일본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한국 수출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보일러, 기계류 및 그 부품과 플라스틱과 그 제품 광학, 정밀기기, 광물성 연료, 왁스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9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또한 ·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광물성 연료, 왁스 1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도 한국의 대일수출시장점유율 보다 중국의 대일수출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전기기기과 그 부분품 , 보일러, 기계류와 그 부품, 철강의 제품 등에서는 대일 시장점유율인 95년에는 한국 대일시장점유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2000년에는 오히려 중국 상품이 우위로 역전이 되었다.

즉, 최근 중국의 큰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국과 일본 등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는 모습을 중국이 보이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한국의 경제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중국이 자본재, 기계류 분야에서까지 빠르게 대미, 대일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대미시장, 대일시장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한국을 역전하고 있으며 이는 곧 고기술 분야 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 간 산업협력관계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수교 이후 간접투자에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95년 170여건, 1억 4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대중국 투자는 90년대 중반 연간 700~800건, 8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하

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한국의 국내 생산비용 상승에 기인한 해외투자 필요성 증대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이다. 일반적인 요인 외에 한·중간의 산업구조상의 강한 보완성, 개발경험이 체화된 한국 산업기술에 대한·중국의 높은 관심, 한국의 중국시장 잠재력에 대한 높은 기대 등도 투자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 말 현재 한국의 대중국 투자 건수는 4,910건으로 한국 해외투자의 4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수 기준별로 최대이고 금액은 46억 2,636만 달러로 한국 해외투자 대상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이다. 중국 정부의 통계(2000년 8월말 기준)에 의하면 한국 투자업체는 1만여 개, 투자금액은 97억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외투자의 건당 규모는 2000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으로 94만 달러에 불과하여 심한 영세성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측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건당 계약액은 100만 달러 미만으로, 중국 전체의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액의 건당 평균액 250만 달러 전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투자 규모의 영세성 또한·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점증하는 자본 및 기술 집약형 투자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의 대중 투자활동이 문제점으로 반영되고 있다.

투자지역은 동북 3성 및 활발해진 지역에 크게 편중되고 있으며 2000년 말 현재 총투자 건수의 83.9%, 총투자 금액의 74.3%가 이들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서 한국 진출 업체끼리 과도하게 투자조건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한국 중국 간에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산업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4년부터 개시된 「한·중 산업협력 위원회」가 대표적이며 이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관계분야에서의 관리 경험, 산업기술정책을 교류하고 기술교류와 산업협력활동을 지도·조정하며 양국산업분야 협력 사업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국과는 주로 산업협력 위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시 말해, 민간 기업이 협력의 주체가 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부 간 협력에는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협력의 주체가 되는 민간 기업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정부에 비해 빠르기 때문이다. 정부 간 협력은 비록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합의 사항을 실제 협력의 주체가 되는 기업에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향후 민간 산업협력은 기존 투자협력 이외에 기술협력, M&A, 공동생산 등의 형태로 다양화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간 협력에는 양국 간 견해차가 크지 않고 실제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중점이 이전될 가능성이 존재해서 정부 간 협력에는 실질적인 협력분야가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협력, 반도체산업, 스포츠산업 등 양국 간 견해차가 적은 산업이 민간보다는 정부 간 협력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 참조).

<표4-1> 한·중 세계교역 비중 추이

(단위 : %)

	1995년			2000년			2004년		
	수출	수입	계	수출	수입	계	수출	수입	계
한국	2.7	2.7	2.7	2.8	2.5	2.6	2.8	2.4	2.6
중국	3.0	2.6	2.8	4.0	3.5	3.7	6.6	6.0	6.3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제조업부문의 대응전략」 참조, 2005.12, p.12.

<표4-2> 한·중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

	1995~2000년			2000~2004년		
	수출	수입	계	수출	수입	계
세계	4.8	5.2	5.0	9.4	9.6	9.5
한국	5.5	3.5	4.5	10.2	8.8	9.5
중국	10.8	11.2	11.0	24.2	25.7	24.9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제조업부문의 대응전략」 참조, 2005.12, p.20.

제 2절 양국의 산업구조 분석

1. 농·수산업부문 비교

우선 농산물 분야를 보면, 미국과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파프리카나 사과 그리고 복숭아, 딸기 등이 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의 FTA 체결의 경우는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다 힘들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소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품질이 한국에 뒤지지 않은 품질을 갖고 있으며 한국산의 50% 가격대로 한국산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는 오히려 미국과의 FTA 보다 더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다.

즉, 한·중 FTA에서도 농업문제는 양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중국이 한국에 대해 상대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문은 주로 자원 및 노동집약형 상품으로, 동식물 식용원료 광산물 동식물 상품을 원료로 하는 방직원료 및 가방 의류 금속제품 기계전자제품 기타 제품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통계로 본 한국 농업의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중국은 쌀,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배, 과 등 주요 농산물 생산량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FTA 농업협상에서 우리 측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³²⁾

중국에서 지난 10년(1995~2005년) 동안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난 농산물인 사과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70% 이상이 증가해 2005년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사과가격의 하락으로 사과에서 배로 품목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절반(48.7%) 가까이 생산량이 감소했다. 과 생산량도 지난 10년간 160% 증가하면서 세계 1위의 생산국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에서 중국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130%가 증가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중국의 농가 인구 비율도 65%에 달했다.

농업지표를 중심으로 한·중 양국의 경제지표를 정리한 <표4-3>를 보면, 농림어업 생산액은 한국이 약 250억 달러, 중국은 약 4,100억 달러이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약 4%, 중국 약 26%로 전형적인 최빈개도국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가인구비중을 보면 한국의 경우 7.4%(340만명), 중국의 경우 60.2%(7억 8천만 명)로 세계 최대의 농가 인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총 국토면적에서 농경지 면적의 비중은 12.9%로 한국 18.5%보다 낮았고, 호당 평균 경지면적도 한국농가의 경지면적보다 훨씬 작아 중국농가의 영세성과 농촌 잉여 노동력의 존재를 알 수 있다.³³⁾

농산물 교역을 보면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225억 달러, 수입액은 116억 달러로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액이 약 109억 달러에 이르는 농산물 최대의 수출국으로 농업부문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관한 입장이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양분된 가운데 중국이

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의 경제적 효과와 이슈」, 한·중공동세미나, 2004. 10, pp.12-13.

33)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FTA협동연구시리즈 04-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75.

품목별로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대외 농업협상에서 공조체계 구축 등 농업협력에 복합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에서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바탕으로 농업생산과수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거대시장으로 향후 세계 농산물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역내 농업생산과 교역에 제한 적인 영향을 미칠 뿐 주도권을 가질 여지가 없어 부정적인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³⁴⁾.

<표 4-3> 한·중 주요경제 및 농업지표(2005년)

	한국	중국
GDP(10억 달러)	787.5	2,259.2
- 1인당 GDP(달러)	(16,291)	(1,728)
농림어업 GDP(10억 달러)	25.5	410.5
- 농림어업 비중(%)	(3.7)	(26.1)
인구 (백만 명)	48.1	1,299.8
- 농가인구와 비중(%)	3.41(7.1)	780.7(60.2)
국토면적(천km ²)	99.6	9,600
- 경지면적과 비중(%)	18.2(18.5)	1,301(12.9)
- 호당 경지면적(ha/호)	(1.48)	(0.51)
총 수출액(10억 달러)	284.7	593.3
- 농산물 수출액	(1.9)	(22.5)
총 수입액(10억 달러)	261.1	370.8
- 농산물 수입액	(17.2)	(11.6)

자료 : 농림부(2006), 「농림업 주요 통계」, 중국인민은행,
「통계연보」 ; 중국국가통계국(2006), 『중국통계연감』

34) 정상호,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23.

한·중간 농산물 무역 현황을 보면 한·중 수교 직후인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중국은 쌀, 채소, 과일, 밀, 옥수수, 육류 등 주요 농산물의 대부분을 100% 자급하는 수준을 유지하며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4-4>는 HS 2단위를 기준으로 원래의 축산(HS 01, HS 02)과 낙농 및 기타(HS 04, HS 05)를 통합하여 축산물, HS 03은 수산물, HS 03- HS 14는 농산물, HS 15 - HS 24는 가공식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2000~03년간 평균 값을 계산했을 때, 한국은 중국에 비해 HS 2단위 분류에 따른 모든 1차산품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중 축산물이 3천만 달러, 수산물이 5억 5천만 달러, 농산물이 9억 6천만 달러, 가공식품이 3억 3천만 달러로 농산물과 수산물에서의 무역적자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HS 2단위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이 부문들이 한국의 1차 산품 무역적자를 견인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중국은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수입하는 한·중 농업부문 교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1차 산품 수입의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축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대중국 수입의 중요한 특성은 가공식품보다 농산품 수입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또한 한·중국 수입의존도는 1988년 5.4 %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42% 이상 많은 농산물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한·중 양국 간 작목구조의 유사성과 농산물은 신선도, 즉 지리적 인접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5)

35) 정상호, 상계논문, pp.25-26.

<표 4-4> 한국의 대중국 1차 상품 교역(2000-03년 평균)

(단위 : 천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총교역액	23,877,008	16,352,577	7,524,431
1차상품	166,979	1,964,979	-1,797,999
축산물	8,294	37,660	-29,637
수산물	61,085	610,468	-549,384
농산물	27,376	989,866	-962,490
가공식품	70,225	326,984	-256,759
산동물	52	5,458	-5,406
육, 식용설육	257	5,775	-5,518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61,085	610,468	-549,384
낙농품	47	1,706	-1,659
기타 동물성 생산품	7,938	24,721	-16,783
산수목, 기타 산식물	5,640	3,832	1,808
식용채소, 뿌리	718	109,660	-108,942
식용과실과 견과류	8,654	15,738	-7,085
커피, 차	2,053	18,697	-16,644
곡물	77	706,081	-706,004
제분공업생산품	2,108	14,687	-12,579
종자, 과실, 공업용식물	7,243	110,905	-103,661
락, 검, 수지	807	7,200	-6,393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78	3,068	-2,991
동식물성 유지	3,560	7,419	-3,859
육류, 어류, 갑각류 조제품	1,426	26,497	-25,072
당류와 설탕과자	22,095	11,405	10,690
코코아 및 조제품	445	3,578	-3,133
곡물, 곡물분, 전분	13,981	47,037	-33,056
채소, 과실, 견과류 조제품	1,314	62,490	-61,176
각종 조제식료품	14,083	57,627	-43,545
음료, 알코올, 식초	6,911	21,555	-14,644
식품공업 잔유물	1,332	83,933	-82,601
담배	5,079	5,443	-36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04)

2. 제조업의 비교

제조업분야의 경우 경공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물론, 가격대 성능비로서는 한국이 월등하지만 현재 쫓아오고 있는 추세를 보자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며,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서 경공업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중 FTA에서의 경공업은 한·미 FTA와의 경공업과는 다르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한국과 중국 간의 관세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평균관세 11%이지만 중국의 경우 평균관세가 10%가 채 미치지 않으며 품질수준에서 한국이 월등한 수준이나 중국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은 턱없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공업 품목이 미국시장을 장악 하기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³⁶⁾

한·중 수교 후 10년간 양국 간의 교역규모는 지난 92년 60억 달러에서 2000년 3백14억 달러로 연평균 20.4%가 증가했다. 중국은 한국의 2대 수출국가로 부상한 것이다. 대중국 수출이 23.8%로 수입 16.8%보다 빨리 증가해 수교직전 적자에서 수교 후 흑자로 전환됐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정보통신 등 중고위 기술 산업으로 고도화를 이뤘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정보통신 제조업(24.7%), 화학·의약(21.4%), 비금속광물(33.2%), 석유(15.7%), 정밀기기(14.7%) 등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주력수출품목이던 플라스틱·고무(6.3%) 등 저위 기술 산업들은 0.1%를 차지, 전체 평균치인 9.8%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구조면에서 한국은 대체로 전기·전자, 수송기계, 화학 등이 주력업종이다. 중국의 경우도 전기·전자, 화학, 음·식료품 등의 비중이 높지만 수송기계의 비중이 특징적으로 낮은 반면 섬유·피혁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양국의 전기·전자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모든 수송기계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기계 산업의 비중은 정체 내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의 기술수준에서 한국은 저위기술산업→중저위기술산업→중고위기술산업으로 발전패턴이 변화하며 ICT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은 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ICT산업의 급속히 상승하는 추세이다(표 4-5 참

36) 趙顯垓. 「동(북)아시아 FTA에 대한·중국의 접근과 시사점」, 한국동북아경제학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2004년 국제학술발표대회, 2004, p.12.

조).

<표 4-5> 한·중 기술수준별 산업구조의 비교

구분	한국			중국	
	1990	1995	2000	1995	2001
ICT산업	16.1	18.4	19.8	10.7	16.0
중고위기술산업	28.8	30.3	30.3	28.7	27.1
중저위기술산업	24.9	27.9	30.3	30.7	27.3
저위기술산업	30.0	23.4	19.6	30.0	2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OECD, Industrial Database, 중국국가 통계국 편 (1996, 2003), 「중국통계편람」 참조

한·중 양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면 한국은 승용차 생산이 중심인데 비해 중국은 상용차 생산비중이 높다. 경쟁력은 세계시장 점유율(2000년) 면에서 한국은 3.6%, 중국은 1.0% 정도이다. 협회 및 3개 주요 자동차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을 기준(100)으로 하였을 때 한국과 중국은 완성차의 품질 면에서 각각 86.3과 55.0, 가격 면에서는 각각 76.3과 70.0, 종합 경쟁력 면에서는 83.8과 50.0을 기록하며 품질 면에서나 종합 경쟁력 모두 높게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교역의 경우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능가하고 있어 한·중 기업간 협력 및 전략적 제휴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승용차 기준으로 한국의 관세율은 8%이나 중국의 관세율은 평균 39.5%, 부품 15.2%로 무척 높으나 2006년 7월 1일부터 각각 25%와 10.5%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의 철강 산업을 보면 한·중 철강 생산량이 2억 8,800만 톤으로 세

계 전체의 약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6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한 반면 한국은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철강 산업의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현재 한국은 기술면에서 일부 고급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본과 동등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아직 고급제품을 생산하지는 못하나 여타 제품은 생산이 거의 가능한 상황이다. 또 수출시장 점유율, 무역특화지수 등 사후적으로 현시된 경쟁력 지수로 볼 때도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다. 철강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중국이 5.5%로 한국의 2.4%보다 2배 수준에 있다.

한·중 섬유 산업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긴 하나 무역수지 흑자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섬유산업이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섬유산업의 경쟁력은 RCA 지수, 시장점유율 변화, 기술수준 및 가격경쟁력 등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섬유류, 중국은 의류, 일본은 화학섬유원료와 모직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획 및 디자인, 방직업과 화학섬유업, 염색가공업 등을 포함하면 모든 부문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자 산업면에서 한·중 생산액은 각각 5.7%, 11.3%로 세계 전체 생산액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은 감소 또는 증가에 그치고 있지만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수출입 측면에서도 한국의 전자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입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수출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전자산업은 세계 전체에 수출특화상태로 치열한 경쟁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산업 관련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에서는 한국은 0~8%, 중국은 최혜국대우 관세율 기준으로 5~40% 수준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한·중 석유화학 산업은 에틸렌 기준 세계 4위, 6의 주요 생산국이나 중국은 공급부족으로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제품 수입국이기도 하다. 가격, 품질, 기술, 마케팅 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높게 평가되고 발달단계는 한국이 성숙진입단계, 중국은 성장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한·중 석유화학 산업에서 무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에 특화하는 특성을 보이며, 2002년 기준 한국은 수출 39억 달러, 수입 2억 달러로 대 중국 수출우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이 일방적인 수출을 하고 있다. 또 한국이 대 중국 투자에서도 전체 건수의 61%, 금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중 양국의 일반기계 세계 생산비중은 약 6.1%이며, 한국은 일반기계 산업의 생산액이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중국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기계 산업 강국인 일본의 생산이 최근 들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일반기계의 수급상황은 우리나라는 내수가 감소한데 반해 중국은 고성장에 힘입어 생산재투자 확대로 일반기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수출입 면에서 중국은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한국은 감소세를 보이며 수출은 모두 증가 추세이다. 양국의 경쟁력은 한국, 중국의 순이지만 중국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고 우리나라 최대 경쟁국으로 대두되고 있다(표 4-7 참조) 37).

<표 4-7> 한·중 산업간 경쟁관계

		양국경합	한국우위	중국우위	기타 ³⁸⁾
주요 업종		의복 컴퓨터 가전 비철금속	직물 고무타이어 통신기기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선박	신발 나무, 종이 완구 가구 잡제품 시계	기계 정밀기기 화공품 기타운송 귀금속 1차 상품
수출 비중(%)	한국	19.2	53.3	3.8	23.7
	중국	30.3	25.7	19.3	24.7

자료 : 「한·중 산업간 경쟁 및 보완관계」 (한국은행, 2003) 표 인용, 2002년 기준 ³⁹⁾

한국의 대중국 수입구조는 아직도 저위 및 중저위 기술 산업이 전체 59%로 주

37) 유관영,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분석」, 「FTA협동연구시리즈」, 산업연구원, 2003, pp.72-78.

38) 한중 양국 모두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

39) 정상호, 전계논문, p.33.

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수출구조와 마찬가지로 고도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연평균 증가면 에서 정보통신 제조업이 25.6%, 기계설비 30.1%, 정밀기기 20.5% 등 고위기술 증가율이 빠른 편이다.

한국과 중국은 산업구조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중국의 추격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노동집약적→기술집약적→첨단산업 순으로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비해 기술집약적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으로 구조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주력산업의 경우 한국은 중저위 기술→중고위 기술 산업(전체의 60.4%)로, 중국은 저위 기술→중저위 기술 산업(전체의 62.5%)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 수송기계 산업이 주력산업인 반면 중국은 화학, 의약산업이 주력사업으로 구조면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한·중 양국은 수입수요가 높은 정밀기기산업은 모두 취약한 편이다.

한국과 중국은 기술격차를 보이는 산업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철도·에너지 등은 2~3년, 비철금속과 무선통신 등은 4~5년, 생명공학과 정밀화학 등은 6~7년, 반도체 소자 등은 7년 이상 한국이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은 주로 중화학공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요 산업은 자동차 약품 유기화학품 등이다. 중국과 한국의 경쟁분야는 주로 고무 및 관련 제품 종이 및 판지, 인쇄품, 보일러, 기계 상품 등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보다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와 체결한 FTA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제조업부문 협상을 위한 자체적인 면밀한 사전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제 3절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1. 경제적 효과

중국의 신화통신에 의하면, 2006년 10월 13일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원자바오 총리와 한·중 FTA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 합의의 진위 유무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한·중 FTA가 한·중 양국 간 중요 통상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한·중 FTA 협상은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것인가? 중국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는 한·중 FTA 협상의 현실적 가능성을 높여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단기간 내에 한·중 FTA 협상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정부가 한·중 FTA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경제적 결과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 FTA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인 무역확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동태적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국내농업 기반의 상실, 국내산업 공동화의 가속화 및 대 중국 무역흑자의 적자로의 전환 등의 부정적 경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중 FTA에 수반되는 이러한 국내경제 구조조정의 정치적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국내여건이 아직은 조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⁴⁰⁾

또한 한·중 FTA가 한·미 FTA 협상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 추진된다면, 한·중 FTA 또한 농민단체를 비롯한 잠재적 피해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국내적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중 FTA가 이러한 국내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정치 이슈화된다면, 이를 둘러싼 국내정치적 갈등은 더욱더 증폭되어 협상의 국내정치적 지지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정치적 리

40)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한·중간 가공무역 현황과 시사점」, 한·중무역, 2004, 5월호.
p.15.

더쉽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한·중 FTA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한·중 FTA의 단기간 내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적극적인 추진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기존의 소극적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예상과 달리 양국 간 FTA 협상 논의가 의외로 급진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적극적인 입장으로의 선회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 정치경제적 조건이 성숙되지 않는 한, 한·중 FTA 협상의 현실적 진전은 최소한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 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5년 발간한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이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에는 한국의 GDP가 2.52%까지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중국의 경우는 0.78%의 추가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여기에 관세철폐에 더하여 무역장벽 전반의 철폐 및 FTA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활성화 효과를 감안하면,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한·중 FTA 체결 시 단기적으로 무역확대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한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대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확대 효과의 삭감 및 대중 무역적자의 확대 등 한국경제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은 한국에 완제품과 농수산품을 수출하는 양국 간 교역구조에 비추어 볼 때, 한·중 FTA가 체결되면 대부분 최종 소비제품인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이 대거 유입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며, 중국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한국의 대중 중간재·부품 수출이 촉진돼 한국기업의 매출 및 수익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값싼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또한 한·중 FTA로 제조업의 중국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국내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의 실업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한·중 FTA는 현실적으로 한·미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FTA가 되기는 어렵고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이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확보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즉 한·중 FTA가 낮은 수준으로 체결된다면, 한국은 한·미 FTA에서와 같은 경제제도의 체질개선 및 기술학습, 혁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동태적 효과를 한·중 FTA로부터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기업의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중국이 기술 학습 및 혁신을 통해 생산력을 제고 할 기회는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한·중간의 기술격차가 해소되게 된다면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FTA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무역효과도 잠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FTA의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칠레를 예로 들자면 지난 20년간 남미에서 경제적 혼란을 경험하지 않고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온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NAFTA 체결 시 좌파정권이 득세했던 칠레와 코스타리카 뿐 이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16년째 좌파가 장기집권하고 있는 이 나라는 안정과 발전을 함께 누리고 있다. 1990년 이래 경제성장률이 연 5% 이상으로 남미에서 최고임은 물론 동아시아 여느 국가와 맞먹을 정도다. 자유무역 정책을 기조로 소외계층에 대한 점진적인 사회복지 개선 등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전 세계 34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고, 미 헤리티지재단의 조사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 중의 하나로 꼽혔다.⁴¹⁾ 그런 중에도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개선했다. 그 결과 지난 15년 사이 빈곤층 비중을 전체인구 40%에서 18%로 낮췄다. 덩달아 민심도 극좌에서 중간으로 이동했다. 결국 칠레의 성공 예에서 FTA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장기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시장 접근의 제약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미 거대국가와 주변 국가들과의 FTA 추진의 주요 통상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2004년)이고, 한국 역시 중국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2003년, 홍콩제외)이다. 한·중 FTA의 추진은 급부

41) KIEP 북경사무소, 「한·중·일 3국 기업의 FTA 대응전략」, 중국경제현안브리핑. 2004-01호. p.27.

상하는 중국경제를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중경제협력의 강화 및 동북아경제협력의 구체화라는 틀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장 긴밀한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전면적인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데 기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매우 탄탄한 경제구조를 갖게 됨과 동시에 중국의 외화를 얻음으로서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제조업에서 다소 약할 것으로 보여 지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했으므로 국내의 제조업상에선 미국과 중국 간의 제조업 경쟁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가격대 성능비로서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더 우수한 한국산 제조업물품이 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성능이 좋은 편이나 중국은 가격은 매우 싸지만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국내산 상품은 성능과 가격이 모두 좋은 편이므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리고 미국 간의 FTA로서 더욱 경쟁력이 높아진 금융업이나 혹은 서비스시장이 중국으로 매우 쉽게 진출 할 수 있어서 우리 서비스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유통업체 E마트가 현재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 이때 FTA를 체결할 경우 타 유통업체 또한 중국진출에 쉬울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미국과의 FTA로서 다소 힘들어진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중국시장 진출이 어찌면 호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2. 한·중 FTA의 추진방안

중국과의 FTA 추진에는 농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 민감 산업 부문의 피해 및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해 한·중 FTA가 각 산업별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연구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FTA 정책의 틀 속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관세자유화를 차별적으로 진행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중국에 우리 농

업의 여건과 쌀이 가지는 국내정서 등을 강조하여 유연한 협상태도를 끌어낼 수 있는 논리 개발도 필요하다. 제조업에 있어는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실업의 증가와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대중투자 가속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 양국 민간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 및 산·관·학 공동연구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양국의 민감 분야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생(win-win)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한·일 FTA 추진이 2003년에 이미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공식협상을 개시한 데 비해, 한·중 FTA 논의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한·중·일FTA 공동연구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양국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양국이 진행 중인 여타 FTA 협상 일정 때문에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계획 중인 민간차원의 한·중 FTA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연구가 다음 단계에는 정부차원의 산관학 공동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 동안에 한·중 FTA의 장애요인들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⁴²⁾

이 환경조성은 FTA 추진의 장애요인을 완화하고 양국의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를 깊이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양국의 이해가 걸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상호간의 깊은 이해에 기반을 둔 신뢰형성(trust building)과 각종 불확실성의 제거가 중요한 과제이다.

한·중 FTA는 그동안 중국 측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달리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를 우려한 우리 측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양국의 산·관·학 공동연구 등 협상의 사전준비 작업을 시작한 상태인데 앞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를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의 하나로 해석하는 중국이 한·중 FTA 체결을 더욱 서두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이 최근 농수산물 분야 조율 가능성 등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 협상의 본격 진행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

42) 한국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제7권 제2호, 2006, p.64.

했다. 1년간의 공동연구가 끝나면 2008년부터 양국 간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유럽연합(EU) 캐나다에 이어 중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경제 활력 회복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임은 분명하다. 그간 정부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온 측면이 없지 않다. FTA 체결로 인해 중국 농수산물의 관세를 대폭 내릴 경우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제조업 분야에선 무역흑자 규모가 커지는 등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무엇보다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FTA가 체결되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로 관련국 간에 개방과 경쟁의 효과가 나타난다. 기업들은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소비자들 역시 공산품 가격 하락과 품질 향상, 다양한 상품 구매의 혜택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주요 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신 시장을 넓혀야만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FTA 추진이 갖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과의 협상에선 주요 수출품의 개방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방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라도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협상전략을 짜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중 FTA의 추진방안을 크게 5가지의 경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 관 학 공동연구의 조기 출범

양국 모두에게 있어 한·중 FTA 협상의 본격적 추진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갖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의 합의에 따른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에 조속히 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 간의 합의 이전에도 양국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향후 공식적인 정부간 공동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특히 양국 간에 가로놓인 FTA 수립의 장애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상호간에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많은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동 연구를 통해 양국의 입장을 상호간에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양국이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업계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만들어 가동함으로써 협상의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중 FTA의 추진에서 한국 농업이 느끼는 불안함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이해하고 협상에 참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 양국 연구기관의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농업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양국 농업 교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협력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는 한·중 양국의 국내 경제주체들에게 논리적으로 한·중 FTA가 win-win 협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중 간에는 2003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당국과 연구기관 간에 FTA를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민간차원의 공동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구체화 해 나가야 한다.

2) 다양한 협력의제의 발굴

FTA는 양자 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과정의 특성을 갖는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이익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부문 내에서의 협력증대와 이에 따른 이익확대가 FTA의 정치적 성공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이나 제조업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면 FTA 체결에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관세율 인하와 무역원활화 등 교역 활성화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FTA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의제를 발굴해야 한다.⁴³⁾ 교역문제에 있어서는 WTO의 규칙과 국제적인 통상규정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투자, 기술협력, 정책협조 등을 포함하는 다

43) 양평섭, 「대중국 무역과 투자의 상호관계와 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부 발표자료, 2004, p.15.

양한 분야의 협력의제를 포함시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협상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향후 수년간에 걸친 중국의 관세율 인하계획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세인하 뿐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양국 간 기술표준의 조화, 상호인증제의 확대, 유통구조의 개선, 정부조달에 대한 참여 보장, 전자무역시스템의 구축, 지적재산권의 보호, 환경/에너지 협력 등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여 FTA의 틀 속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FTA와는 별도로 기존의 다양한 협력 틀 속에서도 동시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3)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한국경제에 주는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경제가 과열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환율변화를 포함한 중국의 금융건전성에 대한 우려, 양국 무역마찰 증가에 대한 우려,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동북아 지역 주요 산업의 생산과잉 우려 등이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⁴⁴⁾

따라서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불안정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정부와 민간 각 부문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양국 경제정책 당국이나 연구기관들의 상시적이고 긴밀한 상호 정보교류가 포함된다. 즉 아시아통화기금(AMF)이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한 역내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DDA 등 다자간 통상협력에서의 정책 공조,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의 투명화 등도 중요한 정책협력의 영역이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역내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분야에서의 투자협약체 구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역내에서 과잉 증복투자가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면, FTA에 따르는 양국 산업계의 우려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 중국의 서부지역 자원개발이나 시베리아 가스전개발을 비롯한

44) 魚明根外,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p.85.

자원개발과 수송망 사업에 한·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도 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상시적인 정책협조와 산업협력의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경제협력 심화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여, FTA 협상을 위한 저변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 비경제분야 교류 활성화

한·중 FTA가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이라는 인식이 양국 국민사이에 확산되고, 인근국가들에까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동북아 각국에서 점증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FTA 체결에는 양국 모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민의 우호적인 정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최근 양국의 고대사의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양국민간의 오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양 국민 사이의 우호적인 정서가 훼손될 경우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문화적 교류확대로 상호이해 증진, 양국 간 관광교류의 지속적 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 동북아 경제공동체 개념 공유를 위한 시민적 노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

5) FTA에 대한 기업 및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을 기업 차원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개방적인 세계경제 없이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은 개방화된 세계시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왔다. 이미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는 첨단산업에서 노동집약적 산업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⁴⁵⁾ 이 동북아 공장의 경쟁력은 3국이 서로의 경쟁력 있는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더욱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양국의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FTA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중 FTA 형성을 앞당기는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또한 양국 정부는 개방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중 FTA야 말로 win-win을

45)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서울: 외교통상부, 2004, p.124.

통한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 1절 결론

본 연구는 한·중 FTA 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향후 한·중 FTA에 대한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국과의 FTA 체결은 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의 확보 및 상호간의 통상마찰의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억제의 효과를 가져와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여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간 분업구조의 고도화와 대 중국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일 FTA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한·중 FTA의 체결은, 한국을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함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내 분업구조의 고도화와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도 기대된다.

그러나 한·중 FTA의 체결은 국내 일부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패자(loser)집단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과의 FTA 추진 시 가장 민감한 업종은 농업 및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일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 및 제조업부문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 FTA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한국 제조업종 중 의류, 피혁, 목재가구, 기타 수송 장비 등과 같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의 증가를 의미하며,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 실업의증가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FTA 추진 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

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만한 FTA 추진을 위한 ·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⁴⁶⁾

또한 FTA 체결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로 한국의 대 중국 투자 중 수직적 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이미 대 중국 투자의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 중 FTA 추진 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FTA 체결 후 대중 투자의 확대와 함께 국내 생산을 동시에 확대시키고 FTA를 통한 대 중국 투자의 확대가 국내 산업공동화가 아닌 산업고도화의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양국의 경제통상협력이 날이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는 현실은,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FTA에 의한 · 일부 분야의 부정적 충격 또한 매우 클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 중 FTA가 각 산업별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민감 산업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실제로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FTA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된 농업 등 1차 산업과 제조업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범분야의 조화 및 개선, 투자협정, MRA 등 다양한 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FTA가 다루는 협상대상 분야가 다양해 진 것은, WTO체제하에서 진행 중인 DDA 등 다자간 협력의 이슈가 점차 상품 교역 외의 다양한 포괄적인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무역협정인 FTA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한 · 중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상정하고 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 자원개발 · 기술표준 ·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6)삼성경제연구소, 「한 · 중 · 일 자유무역지대 설립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일반균형모형(CGE)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006, p.78.

제 2절 정책적 제언

한·중 FTA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그러므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 하면서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되는 FTA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원 총리가 자신 있게 우리나라와 FTA를 맺겠다는 것은 상호간의 윈윈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뚜렷한 윈윈전략은 크게 보이지 않으나 자동차산업과 같은 경우는 가능 하리라고 본다.

자동차 산업의 특징을 보면 자동차의 부품은 약 5만개의 부품. 이것을 모두 다 생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잘 짜인 생산라인이 필요한데 중국은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필요하다. 과거와 현재까지 일본에게서 부품을 수입하던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을 꾀하고 있으며 일부 부품은 한·미 FTA로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과거 일본이 말았던 이런 분야를 이제 한국이 중국에 대해 부품을 수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중국의 수출길이 열릴 수록 우리의 자본도 더욱 더 커져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윈윈전략 중 하나이다. 이처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야 말로 양국 FTA 협상에 가장 좋은 대안일 것이다. 또한 취약한 부분에서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는 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고도의 치밀한 전략을 가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姜文盛外,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姜文盛外,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고일동외,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3-06), 한국개발원, 2003.
- 김석우·김주연, 「한국의 쌍무적 FTA 형성의 정치경제: 경제적 효용성과 국내정치적 측면에 관한 고찰」, 법률행정논집, 제11권, 2003. 12.
- 김양희·김종걸,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조사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5.
- 金益洙, 「중국투자론 -이론과 실제-」. 서울: 博英社, 1999.
- 남중현, 「한국 FTA정책의 虛와 實」. 세계경제연구, 2006.
- 박순찬, 「한국 FTA 추진의 전망과 과제」, 「KIEP 세계경제」 5월호, 대외경제 협동 연구시리즈 03-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박순찬·강문성, 「한·미 FTA의 무역·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박인원,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CGE 모형 분석」, 2005.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Issue Paper, 2006. 5. 2.
- 손찬현, 「한·일 FTA의 경제효과와 정책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유관영 외, 「한·중·일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경제사회연구회소관기관 FTA), 2003.
- 안충영·이창재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2002.

- 양평섭, 「대중국 무역과 투자의 상호관계와 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부 발표자료, 2004.
- 이창수,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對中투자와 일본의 對韓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12.
- 이홍식·이종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정인교,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1a.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1b.
-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정인교·오동윤, 「중-아세안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3.
- 鄭仁敎外,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경제사회연구회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2.
- 趙顯垓, 「동(북)아시아 FTA에 대한·중국의 접근과 시사점」, 한국동북아경제학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2004년 국제학술발표대회, 2004.
- 지만수·남영숙·조현준·이홍식·김은국,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KIEP 북경사무소, 「중국 FTA 정책의 기본 방향과 향후 전망」, KIEP 한·중경제포럼, 2004. 6. 21.
- KIEP 북경사무소, 「한·중·일 3국 기업의 FTA 대응전략」, 중국경제현안브리핑. 2004. 1.
- 한국무역협회, 「중국 관세율 및 수출입요령」, 2006.
-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2002. 11.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한·중간 가공무역 현황과 시사점」. 한·중무역 5월호, 2004.

-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2004. 1.
-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중장기 교역 전망」, 연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4. 2. 3.
- 한국산업정보원, 「중국산업연감」, 2006.
- 張小濟·呂剛, 「신 국제질서하의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매커니즘」, 한·중 중장기경제협력 공동연구회 최종세미나(북경, KIEP/거시경제연구원), 2003.
- 曄補靖, 「한·중 FTA 구축 구상, 임무 및 환경조성 방안에 대하여」,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이슈」. 한·중공동세미나 2004,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中國宏觀經濟研究院, 2004.
- 張岸元,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이슈」. 한·중공동세미나 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中國宏 觀經濟研究院, 2005.
- 한국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경제학회, 2006.
- 한국은행 경제분석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설립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일 반균형모형(CGE)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제9권 제1호, 2005.
- 대외경제연구원(<http://www.kiep.go.kr>)
- 대외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 한국산업경제연구소(<http://cmcost.or.kr>)
- 통계청(<http://www.nso.go.kr>)

[외국문 자료]

- Abe, Kazutomo,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KIEP Conference Proceedings 2003-05.
- Choi, Nakgyoon, Soon-Chan Park, and Chang-Soo Lee,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Seoul: KIEP, 2003.
- Ferrantino, Michael H. and H. Keith Hall, 「*The Direct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Office of Economics Working Paper.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Korean Perspective. in Economic Analysis of the Japan-Korea FTA, Tokyo University Press, October. 2001.
- Lee, Hiro, David Roland-Holst, and Dominique van der Mensbrugghe, 「*China's Emergence and the Implications for Prospective Free Trade Agreements in East Asia*」. mimeo, 2004.
- Nam, Young-Sook, 「*Overview of Industry Prospects*」, in China in the World Economy: The Domestic Policy Challenges, Paris: OECD, 2002.
- Scollay, Robert and John P. Gilbert, New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in Asia Pacific Washington D.C.: IIE, 2001.
- Schott, Jeffrey J. and Ben Goodrich,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on the Challenges of Reconciliation and Reform in Korea, Los Angeles, 2001.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상업정보교육학	학 번	20048201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황 희 영	한문: 黃 熙 零	영문: Hwang Hee Young		
주 소	광주 광역시 남구 서1동 아남 아파트 101동 1309호				
연락처	018-670-6300		E-MAIL: lightshe@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7년 8 월 일

저작자: 황 희 영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